

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워킹맘·워킹대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밑에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가부 장관으로 일한 건 영광이었다”며 “제가 마무리 짓고 가지 못하는 사업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후임 장관에는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취임했다.

### ■ 일본군 위안부 문제

201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월 126만원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104만3천원에서 21% 증가한 금액이다.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 정도 늘려왔다.

간병비는 2015년보다 39.4% 늘어난 월평균 105만5천원이 지급된다. 2015년에는 매월 75만7천원이 지원됐다.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가 12월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10억 엔(한화 97억원) 규모 지원 기금 등을 조건으로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 계속해서 입방아에 올랐다.

한·일간 위안부 협상 타결 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책임을 넘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민간위원회 지원업무를 맡겼던 산하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 협의회’ 초안을 작성했다가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민간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등재와 관련한 정부 부처들이 일본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미리 선긋기에 나섰다. 지적이 나왔다.

## 소비자 보호

### ■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015년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능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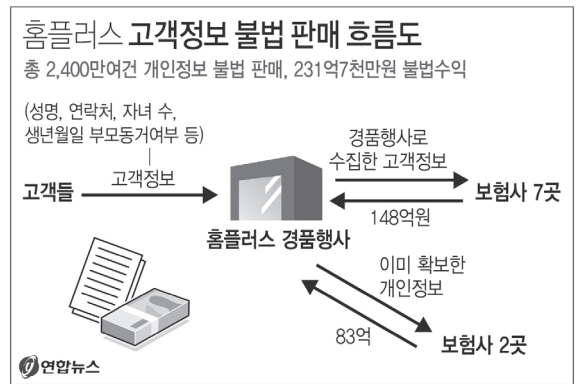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며,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천 40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2015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

제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하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 할 1·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깨알보다도 작은 크기인 1mm의 글씨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합수단이 응모 고객 200명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는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천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천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정보를 통째로 넘긴 뒤 보험사에서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한 회원에 대해 뒤늦게 ‘정보제공 동의’를 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같이 사후에 동의한 회원들은 보험모집 대상자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천4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사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천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천만원을, 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 전 사장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담당 재판부에 1mm 크기 글씨로 쓴 서한을 보내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고 항의하는 등 재판부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 ■ ‘가짜 백수오’ 논란

갱년기 여성 건강에 좋은 토종 약초로 알려져 인기를 끈 백수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제품 대부분에 식용이 금지된 ‘가짜 백수오’ 성분이 들어있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2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32개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9.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백수오와 흡사하게 생겼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이 21개(65.6%)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발표가 나온 직후 백수오 제품 원료 공급업체인 내츨렐엔도텍은 앞서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가짜 백수오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식약처는 2월 내츨렐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원의 발표 이후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검찰이 지역의 백수오 농가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동시에 소비자원과 시민 단체들로부터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업체와 홈쇼핑 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전 움직임 보이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 ■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끊임 없는 ‘불협화음’ 논란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양대 권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간의 끊임 없는 불협화음이 부각됐다.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가짜 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 식약처의 ‘해롭지 않다’는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소비자원은 2015년 5월 식약처의 백수오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백수오 관련 소비자 상담 중 부작용 사례 400건을 모아 발표하려 했으나 갑자기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당시 ‘소비자 불안조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준정부기관으로서 식약처와 계속 대립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8월에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모기기피제 성분의 유해성을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8월 19일 시판 모기기피제 조사 결과 유럽연합(EU)이 발암 가능성 때문에 사용을 금한 시트로넬라유가 들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식약처는 시판 제품은 모두 안전성 검사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 금지됐다는 소비자원의 발표 또한 사실과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 사용경험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쓰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8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두 기관의 입장차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질타하자 발표 12일 만인 8월 31일 저녁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12월에는 당면 속 알루미늄 함량을 놓고 식약처와 엇박자를 드러냈다. 소비자원이 12월 17일 국내 대부분의 당면의 알루미늄 함량이 유럽 연합(EU)의 기준보다 최대 9배나 높다는 내용의 시험·평가 분석 자료를 내자 식약처는 같은 날 연합뉴스에 해명자료를 보내 알루미늄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요 사안마다 의견 대립으로 부딪쳐 ‘신뢰도 추락’이라는 비난을 받던 양 기관은 12월 28일 주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서로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수수료 둘러싼 갈등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생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사이의 갈등이 밖으로 불거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015년 2월 중개보수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고정요율 제도에 대해 신문 광고를 내고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해 “고기주택 및 주택 이외에 적용되는 협의 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문구 위에 단 소제목에서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한 점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라는 전제로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을 연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와주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소비자단체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도 고정요율제에 찬성한다는 듯한 뜻이 된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10개 소비자단체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향해 해당 광고를 바로 잡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이 이들의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의 대응을 하며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 됐다.

##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이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48만2천 대의 디젤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폴크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 약 14만6천 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폴크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3만5천대다.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2015년 9월 소비자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내는 등 개인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의 잇따른 항의와 소송 사태에 휩싸였다.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조사 관련 일지

- 2015. 미국 환경보호청(EPA),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과다배출 9.3 사실 확인해 해명 요구.  
폴크스바겐,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 적용 시인.
- 9.18 미국 EPA 및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RB), 폴크스바겐에 법령 위반 통보.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된 5차종 48만대에 대한 리콜 및 벌칙 부과계획 발표.
- 9.24 환경부,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에 대한 검사 결정.
- 9.25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임의설정 차량의 국내 판매현황 제출 요구. 환경부, 평택항 출고장에서 폴크스바겐 유로6 차량 확보.
- 9.30 환경부, 폴크스바겐 유로6 차량 검사 착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판매된 유로5 차량 12만1천38대에 대한 결함사정(리콜)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
- 10.1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폴크스바겐 6차종 7대를 대상으로 실제 인증시험 재검사.
- 10.6 교통환경연구소, 폴크스바겐 6차종 7대를 대상으로 실도로조건 시험 및 임의설정 여부 검사.
- 10.1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 대상에 4천484대 추가 포함.
- 11.26 환경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사결과 발표.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눈속임 장치를 임의설정한 사실 확인.

연립뉴스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6년 1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일부 기술적 내용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비자들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린 폴크스바겐 사태는 해를 넘어 이어지게 됐다.

## 재외동포·다문화

### 재외동포

## ■ 전 세계 재외동포 718만 명 돌파...중국·미국·일본·캐나다 순

전 세계 재외동포가 2014년 718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교부가 발간한 ‘2015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세계 181개국에 718만4